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도 사외이사 교체 ‘찜뚱’

4대 금융지주 주총 돌입

신한·우리, 차기회장 내정자 표결
기존 사외이사 70% 이상 재추천
지난해 최대 실적… 배당 기대감 ↑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70% 이상이 재추천되면서 사외이사 교체는 예상보다 적을 전망이다. 민간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견제구’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 24일 KB·우리·하나금융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차기 회장으로 뽑힌 진옥동 내정자와 임종룡 내정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두 회장은 주총 안건이 통과하면 차기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NH농협금융은 올 초 지주 회장과 행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달 중 열릴 주총에



4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사

서 신임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새 수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은 사외이사 선임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거수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의 72%(25명 중 18명)가 재추천된 상태다. 이 가운데 새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7명이다. 지주사별로 재선임 인원을 살펴보면 KB금융은 이사 후보에 오른 6명 중 3명, 신한금융은 8명 전원, 하나금융은 8명 중 6명, 우리금융은 3명 중 1명이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법인 정관에 따라 5년)을 채우는 관례를 고려할 때 재선임 된 이들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상황에서도 기존 사외이사 대거 교체는 없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민간 금융회사란 점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특정 인물을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자체에서 임기

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절제하느냐 하는 것들을 자율과 규제방법으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 총 128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없었고,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전체 4건에 그쳤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직무유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 후보를 선임에 반

대권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 라임사태와 과생결합펀드(DLF) 사태, 은행권 채용 비리,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태 등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사회가 대응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연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다.

주총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사이에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당국과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 정례화,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작동 기능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 독립성과 장기 임기 문제의식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연임 성공 시 비판을 받았지만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주주환원으로 적극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예고한 바 있다./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주주배당 늘린 식품업계… 오너일가 보수 ‘정충’ “EU 공급망 자체감사, 아웃리치 지속 전개”

고물가 등 어려움에도 배당 확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대주주 수혜

주요 식품기업들이 배당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오너 일가의 보수도 대폭 인상됐다.

식품업계는 지난해부터 배당 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ESG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G(지배구조) 분야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배구조가 기업의 중요 평가 잣대가 된 만큼 주주 가치를 높여 소액 주주를 달래고,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는 고물가 기조에도 견고한 실적을 낸만큼 배당 규모를 늘린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오너들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와 주요 계열사의 경우 이재현 회장은 지주사에서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400만원, CJENM에서 41억9800만원 등 약 221억3600만원을 받았다. 직전년도의 218억6100만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은 CJENM에서 40억8100만원을 수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 등 계열사 3곳에서 54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롯데제과에서는 급여 20억5000만원, 상여 3억6600만원 등 총 24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21억8500만원)보다 2억31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롯데쇼핑에서는 급여 15억9000만원, 상여 1억5000만원 등 17억4000만원을 받아 전년(15억원)대비 2억4000만원을 더 지급 받았다. 롯데칠성음료에서는 급여 10억9000만원과 상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1억6000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전년(11억33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더 수령했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물산 등에서 추가로 연봉을 지급 받게 되면 총 1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창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클럽’에 입성한 농심의 경우 신동원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15억9573만원이다. 급여로 14억8100만원을, 상여로 1억1310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163만원을 받았다. 이는 2021년 대비 14.46% 증가한 것이다.

농심은 최근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농심은 2004년부터 19년째 4000원의 현금배당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연간 매출 3조원을 넘어서자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다.

농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3조1291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법인 매출이 25.0%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법인 매출도 14.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 늘어난 1122억원, 당기순이익은 16.5% 증가한 116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도 전년보다 올랐다. 담 회장은 오리온으로부터 급여 13억3300만원, 상여금 14억5500만원 등 27억8700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8.1% 오른 규모다. 오리온홀딩스로부터는 급여 6억8700만원, 상여금 7억4900만원 등 14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7.5% 늘었다.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도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로부터 총 약 33억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에서 급여 10억3700만원, 상여 11억3100만원 등 21억6800만원을 받았는데, 전년보다 8.1% 늘었다. 오리온홀딩스로부터는 급여 5억3400만원, 상여 5억8300만원 등 11억1700만원을 받았다.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역’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 11억원, 상여 9억3500만원 등 총 20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도 보수인 약 10억원보다 103.94% 증가한 액수다.

삼양식품은 22년 사업연도 배당금을 1주당 600원의 배당을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주당 800원의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총 배당액은 주당 14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배당액 1000원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배당 총액도 75억3260만원에서 104억5584만원으로 29억2324만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올렸다”며 “주주환원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자부 공급망 TF 회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법 대응 논의
“입법 예의주시… 우리기업 부담 최소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 대상 공급망 자체 감사가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 평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 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법안을 통해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고용인 500인 이상, 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이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통상전략지원관은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체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해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